석유화학산업 존속 위협…특별법 제정·지원 절실

국회서 '석화산업 특별법 공청회'
산업용 전기료 특례 지원
친환경 투자 세제·금융 혜택 절실

정부가 여수산단을 비롯한 국내 석유화학기업에 생산량의 25%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요구한 가운데 산업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파격 지원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사업재편과 설비 감축이 현행법상 업 계의 '담합'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법적 조치와 산업용 전기료 특례 지원, 고부가가치·친환경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등 구체적인 해법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현재 국내 석유화학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산업 생태계 존속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주요 기업들이 4년 연속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공장 가동률은 마지노선인 70~80%를 밑도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회장은 2021년 9조원 흑자를 기록했던 국내 주요 4대 석유화학사는 2024년 1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가 예상되며, 이는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회장은 또 "설상가상으로 석유화학산업 생산원가 중 전기요금이 10%를 차지하는 생산원가 구조상 최근 4년간 약 80% 가까이 인상된 산업용 전기요금은 위기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며 "환경규제 준수 비용과 에너지 비용 부담은 산업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산업계 대표들 역시 절박함을 토로했다.

정대옥 HD현대케미칼 기획부문장은 "서산 대산단지 4개사의 영업이익은 2022년 6640억원 흑자에서 올해 7073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법인세 납부액은 1.2조 원에서 0원이 됐다"고 밝혔다.

곽기섭 롯데케미칼 경영지원본부장도 "여수산단은 이미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위기가 심각하다"며 개별 기업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집중로 제기됐다. 과잉 설비를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생산량 감축이나 설비 통폐합을 협의하는 것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규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에서는 불황 극복을 위한 기업 간 공동행위가 허용되기 매우 어렵다"며 "인가 사례가 전무한 현행법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통해 명시적인 적용 제외 규정을 두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역시 "신속한 통폐합이 절실하지만, 공동행위 규제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별법 제9조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과 공정위와의 협의라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산업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주철현·조계원·김문수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주철현 국회의원실 제공〉

참석자들은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에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담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회장은 산업용 전기료 특례 지원, 고부가·친환경 제품 투자에 대한 파격적 세제 감면, R&D 및 금융 지원 확대를 3대 핵심 지원책으로 제안했다.

김용수 SK지오센트릭 경영기획실장은 "사업재편 시 발생하는 자산 양도·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법인세 납부를 미뤄주는 조치), 취득세 감면 등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대규모 전력 사용이 불가피한 산업 특성을 고려해 전기요금 감면 및 보조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직자 재교육과 전직 지원 등 맞춤형 고용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부회장은 "특별법 제정은 단순히 한 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자동차·반도체 등 전방산업의 소재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공급망을 지키는 일"이라며 "정부 주도의 속도감 있는 사업재편 추진과 제도적 지원이 산업의 명운을 가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엄마와 자녀가 함께…광주시, 여성장애인 가족보호시설 운영

호남권 최초…10세 이상 남아 동반입소 제한 해결

광주시가 호남권에서 처음으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한다.

여성이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할 경우 입소가 제한돼 보호시설 이용을 포기하는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 아동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가족보호시설'이 운영된다. 민선 8기 공약인 여성인권 보호체계 강화 정책의 하나다.

이 시설은 기존 여성장애인 폭력피해 지원체계에서 발생하는 분리 문제를 완화하고, 10세 이상 남아 동반 기준으로 인한 이탈과 재피해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시설에서는 피해자 가족이 분리되지 않은 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시설은 피해자 안전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된다.

광주시는 지난 2월 현장 점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와 생활공간 부족 문제를 확인, 광주도시공사와 협력해 '여성장애인 가족보호시설'로 운영할 매입임대주택 6호(258㎡)를 확보했다. 보호 정원은 일곱 명에서 열 명으로 확대됐고, 공간 구성도 단독주택 1층 4실 체계에서 다가구주택 6채, 11실로 늘어나 가족 단위의 독립 생활이 가능해졌다.

광주도시공사는 임대보증금을 무상 제공하고 기본 편의시설을 지원하며, 향후 4채 추가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보안용 폐쇄회로TV와 비상벨 등 안전 시스템을 보강했다.

광주시는 지난 6월 광주도시공사와 보호시설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속 가능한 운영 틀을 구축했다.

제도적 전환도 마무리됐다. 광주시는 여성가족부에 기존 일반시설의 가족보호시설 전환을 요청해 지난 13일 공식 승인을 받았다. 연간 운영비를 3억 6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증액해 서비스 안정화를 도모했다. 상담과 치료, 법률·의료 연계, 자립 지원 등 회복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구성해 피해자와 동반 가족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운영 성과를 점검해 공간·인력·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수요 변화에 맞춰 추가 전환·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임 합참의장에 진영승 전략사령관 내정

軍 수뇌부 4성 장군 7명 모두 교체

이재명 정부가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4성 장군 7명을 전원 교체했다. 합참의장을 비롯한 육·해·공군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지작사)·제2작전사령관까지 세대교체를 당행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 수뇌부 인사를 1일 발표했다. 합참의장에는 진영승〈사진〉 전략사령관이 내정돼 비육군 출신이 두 차례 연속으로 수장을 맡게 됐다.

육군총장 김규하, 해군총장 강동길, 공군총장 손석락, 연합사 부사령관 김성민, 지작사령관 주성운, 2작사령관 김호복 등은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장으로 진급·보직될 예정이다.

사관학교 기수도 대체로 두 기수 낮아지며 지난 정부 때 진급한 4성 장군은 일선에서 물러난다. 2023년 전면교체 후 2년 만의 '재물갈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흐트러진 조직 기강을 다잡고 조기 안정화를 꾀하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64년 만의 문민시대를 연 안규백 장관의 개혁의지와 북 미사일 위협 속 실전지휘·작전 감각을 중시한 '능력 우선' 원칙을 전면에 내세운 인사라고 풀이된다.

합참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나머지 6명은 2일 임명된다. 합참의장은 주로 육군 대장이 맡던 자리로, 비육군 출신이 연속 내정된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전남도, 주택대출 이자 3년간 월25만원 지원

전남도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최대 3년 간 월 25만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1일 "'2025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450가구를 오는 10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는 금융 지원 상품의 대출 심사를 통과한 무주택 신혼부부와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전남에 주소를 둬야하며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정은 1억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또 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 사이 구입한 전남지역 6억원 이하 주택이여야 한다. 면적 제한은 없다. 총 450가구를 모집하며 시군별 선정 인원은 추후 정해진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혹은 시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교촌치킨, 배달치킨 가격 점주 자율에 맡겨 수수료 부담 완화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며 교촌에프앤비가 배달 치킨 가격을 점주 자율로 맡겼다.

1일 치킨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부 가맹점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에서 수천원 인상했다. 매장과 전용앱 가격은 그대로다.

가맹사업법상 본사는 권장가만 제시할 수 있어 강제는 불가하다. 교촌은 소비자 부담을 줄이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또 bhc도 6월부터 자율정가를 시행했고, 자담치킨은 4월부터 배달가를 매장가보다 2000원 높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맥도날드·롯데리아·버거킹·맘스터치·KFC 등도 배달 메뉴를 비싸게 판다.

/연합뉴스

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부강종합건설(이하 "갑")과 주식회사 부강종합건설(이하 "을")은 2025년 9월 1일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 회사는 "을"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 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각 관계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사의 주주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 날부터 1개월 내에 구주권을 해당 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2일

"갑" 주식회사 부강종합건설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청운3길 3
대표이사 김 군 중

"을" 주식회사 부강종합건설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복호로 6
대표이사 김 군 중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본 회사는 2025년 8월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같은 날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일

주식회사 안산금속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153번안길 17 (운남동)
청산인 김군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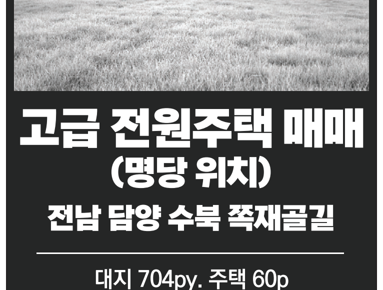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공고

민법 제1053조 및 제105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공고 익일로부터 3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 2025느단449 상속재산관리인선임 (광주가정법원)
피상속인 : 망 오만석(720519-1*******) 2025년 2월 11일 사망
등록기준지 : 광주 동구 증심천로 53
최후주소지 : 광주 동구 의재로 23-8, 101동 104호 (학동, 아남아파트)
청구인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배철성
공고기간 : 공고 익일로부터 2개월
신고처 : 상속재산관리인 법무사 최현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394번길 17-25, 1층 법무사최현진사무소(010-4062-1967)

2025년 9월 2일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고급 전원주택 매매
(명당 위치)
전남 담양 수북 쪽재골길
대지 704py. 주택 60p
카페부속건물 20p. 태양 6킬로
최고급 독일 건축재료. 경치 최고.
급 매
매 16억 9천. 은행 11억.
인수가 5억 9천
010-3646-8700

중 앙 신 용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